

윤 대통령, 3년 4개월만 '팬데믹 극복' 선언

중대본회의 '방역완화' 발표
"국민들 일상 되찾아 기쁘다"
방역·보건종사자들에 감사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7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태원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 설치됐던 안전펜스를 철거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전남도립대 총장, '혁신리더' 필요하다

'중도사퇴' 후임 인선 본격화
추천위 불균형·정견제한 논란
"객관성 확보·투명 검증" 비등

전남도립대학교 신임 총장 선임을 두고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직전 총장이 크고 작은 학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하는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총장추천위 불균형 문제 등이 불거진 것으로, 이번에도 인사권자인 김영록 지사의 입맛에 따라 새 수장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직전 박병호 총장의 사직처리가 지난달 완료되면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를 구성, 신임 총장 선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립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모집 공고와 접수를 진행하고, 24일 서류전형, 31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명의 후보자를 전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신임 총장 선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장추천위 구성 직후부터 여러 잡음이 불거지면서 도립대가 직면한 최대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총장추천위 불균형은 우선 지적된다.

총장추천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전남지사 몫이 4명, 도지사 4명, 시·군·구청장 3명 등 7명에 달한다. 나머지는 당연직인 재정위원장을 포함한 도립대 4명이며, 전남도의회는 2명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를 중심으로 면접 등 검증 과정에서 전남도의 의중에 따라 후보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체 교직원과 학생회장, 부회장 등 학생대표에게 공개됐던 후보자 정견발표를 총장추천위로 제한, 감감이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총장추천위 한 위원은 "지난 2일 첫 회의에서 직전 총장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정견발표 공개 범위를 개인정보 문제, 추천위 검증에 따른 이중적 등 이유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총장의 중도사퇴 등 현재 도립대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혁신이 절실할 만큼 새 총장 후보자의 비전과 계획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립대는 "추천위 결정에 따라 정견발표 공개 범위를 위원회로만 제한하는 대신 후보자들의 공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아직 홈페이지 내에서도 교직원들만 대상으로 할지 등 접근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직선 총장을 뽑는 일반대학과 다른 도립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남도에 치우친 추천위 구성 등은 문제가 크다"며 "신임 총장 선임이 존폐기로 놓인 도립대 혁신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대학이 제대로 서는 고민과 토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유일의 공립대인 전남도립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탈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3년간 45억원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거점지구 사업(HiVE) 공모에도 떨어졌다.

올해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탈락,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다.

또 부실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교수가 고소해 논란을 빚는 등 학내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임 박병호 총장은 이 같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전남도의회는 강도높은 혁신안 수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강화 관련 조례안 10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등 기존 24개였던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뒷받침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게 됐다.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 출연기관(19), 기타기관(9)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시민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김용현 기자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사적지 함께 걷기축제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산으로 5·18사적지를 함께 걸으면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염원을 길이 계승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년 5월 13일 (토) 09:00

장소 햇불코스 (전남대학교정문 운동장 → 광주중앙초등학교)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주관 전남매일

후원 전남대학교 광주중앙초등학교

협조 광주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전남대학교 사적지